

경북도 “현금성 지원보다 기반·서비스 구축으로 저출생 극복”

10년간 출산지원금 증가에도 합계출산율 감소 추세 이어가
출산률 반등 해외 사례 등 분석
지역별 특색있는 사업 중점 추진



경북도는 22개 시·군을 대상으로 출산지원금과 합계출산율의 상관관계 10년 치를 조사·분석해 발표했다. 사진은 경북도청 전경.

경북도는 2일 도내 22개 시·군을 대상으로 지난 10년간 출산지원금과 합계출산율 현황을 조사해 본 결과, 출산지원금이 합계출산율 상승에 유의미한 영향을 끼치지 못했다고 밝혔다.
도가 분석한 바에 따르면 22개 시·군에서 출산지원금은 증가했으나 합계출산율이 증가하지 않고 감소 추세를 이어갔으며, 포항시와 구미시의 경우에는 출산지원금과 합계출산율이 반비례 관계를 나타내기도 했다.
그간 경북도 합계출산율은 2015년 1.46명 이후 2023년 0.86명으로 지속해서 감소하는 가운데 시군별 출산지원금은 꾸준히 늘고 있어 출산지원금 효과성 검증과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의견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또한, 시·군 현장에서는 출산지원금의 과도

한 경쟁으로 인근 지자체 간 인구 빼가기로 변질됐다는 우려도 컸다.
특히, 저출생과 전쟁에 나선 이철우 도지사는 평소에도 현금성 지급은 출산율 증가에 도움이 되지 않으니 돌봄 기반과 서비스 중심의 특색 있는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해 왔다.
이에 경북도는 10년 치 출산지원금 효과성 분석, 시군 현장에서 원하는 출산지원금 지급 형태, 출산율 반등

을 이뤄낸 해외 사례 등을 살펴보고 대책 마련에 나선 것이다.
먼저 경북도는 출산율 반등에 성공한 해외 선진국 사례와 국책 기관의 연구자료 등을 분석했다.
독일의 경우 중앙정부가만 18세까지 아동수당을 지급하고 지방정부는 돌봄·양육 서비스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프랑스도 기본수당, 보육료 지원 등 현금지원 정책은 중앙정부가

주도하고 지방은 돌봄 서비스 지원에 중점을 두고 있다. 2008년 최하위 수준의 출산율을 2022년에 전국 최고 수준(1.6명)으로 이끈 일본 닛토리현 정책 핵심 방향도 ‘현금성 지원’보다는 아이를 낳을 수 있도록 돕는 ‘출산·육아 서비스’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에 따라 경북도는 현금성 지급보다 지역별 특색 있는 돌봄 기반·서비스 확충 등이 합계출산율 반등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하고 관련 사업을 중점 추진해 나가고 있다. 지난달 27일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 방문해 출산지원금 등 현금성 지원 대상과 적정 금액을 정부에서 통일해 줄 것을 건의했으며 효과성 검증을 해보겠다는 긍정적인 답변을 받았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경북도는 현금성 지급보다 지역 현장에서 요구하는 돌봄과 주거 등 저출생 전주기에 필요한 기반과 서비스를 구축해 저출생 극복의 모범 모델을 만들고 전국으로 확산시켜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지역 이모저모

영암군 주민 살피는 농촌왕진버스 운행

영암군(군수 우승희)은 총사업비 4800만원을 투입해, 농한기인 올해 8월말~9월초 덕진·도포·학산·미암면의 주민 400여 명을 살피는 농촌왕진버스를 운행한다.
농촌왕진버스에서는 농작업 질환을 포함해 양·한방 진료, 구강검진, 검안 및 돋보기 추천 등 의료서비스를 제공한다.
영암군은 여성 농업인 건강증진 공모사업에도 선정돼 1억3200만원의 사업비로 600명의 특수건강검진 지원사업도 실시하고 있다.

목포시 의료급여수급권자 일반건강검진

목포시의 의료급여수급권자의 만성질환과 건강위험요인 조기 발견 및 치료 연계를 위해 일반건강검진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2024년 올해 의료급여수급권자 중 일반건강검진 대상자는 20~64세 짝수년도 출생자로, 검진 항목은 신체계측, 흉부방사선, 요검사, 혈액검사 등이며 검진 비용은 무료다.
전국 어디서나 일반건강검진기관에서 검진 가능하며, 예약 후 신분증을 지참해 방문하면 된다.
검진기관은 국민건강보험공단 누리집, 고객센터 또는 목포시 보건소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산청군 ‘韓 쌀페스타’서 식량기술대상

산청군은 ‘2024 대한민국 쌀페스타’에서 식량기술대상을 받았다.
서울광장에서 열린 2024 대한민국 쌀페스타는 국내 쌀 소비촉진 대책 마련을 위해 대통령소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등이 주최했다.
산청군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참여해 논고동쌀, 맑은나라메뚜기쌀, 지리산산청메뚜기쌀 등 산청군 브랜드 쌀을 선보여 큰 호응을 끌어냈다.
특히 고품질 쌀 생산 및 생산비 절감을 위한 품질 고급화 시설 개선과 쌀 소비 촉진 관측 홍보 등 적극적인 지원을 추진한 공로로 식량기술대상 기관 표창을 수상했다.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 출범 속 이주 대책 없는 지장물 조사 비판

국토교통부 산하 공공기관 ‘남부권 성장 핵심 거점 박차’ 출범식 밖, 가덕도 주민 시위
남부권 관문공항인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전담할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이 공식 출범식을 열었다. 잔치집 분위기와 달리 출범식 밖에서는 가덕도 주민 100여명이 보상문제를 두고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국토교통부와 부산시는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 출범식을 지난달 31일 강서구 신라스테이 서부산에서 개최했다.
출범식에는 박상우 국토부 장관, 이윤상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 초대 이사장, 박형준 부산시장, 김두겸 울산시장, 박완수 경남도지사를 비롯해 국회의원 등 150여 명이 참석했다.

이 이사장은 인사말에서 “2021년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정 이후 지난해 10월에는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공단법이 만들어졌다”며 “공단은 4월 말 설립 등기를 마치고 본격적인 업무를 시작했으며, 가덕도신공항이 남부권 성장 핵심 거점이 될 수 있도록 진심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에 출범하는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은 가덕도신공항 건설사업 설계·시공을 전담하는 국토교통부 산하 공공기관(2025년 지정 예정)이다.
한편 이날 행사장 밖에서는 가덕도신공항 대항지구보상대책위원회가 시위를 벌였다. 이들은 부산시가 이주 대책 수립 없이 지장물 조사를 강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경주시, 1680억 추가경정예산 편성

올해 본예산比 8.8% 늘어
경주시는 2일 1680억원 규모의 올해 첫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했다.
이는 올해 본 예산 1조 9000억원 보다 8.8% 늘어난 액수로 2조 680억원 규모로 늘어난다. 이번 추경안은 민선8기 공약사업의 신속한 추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주요 현안사업에 중점을 두고 편성했다.
일반회계는 1조 7783억원으로 1423억원 증액됐고, 특별회계는 2897억원으로 257억원 증액됐다. 주요 재원은 ▲지방세수입 100억원 ▲세외수입 203억원 ▲지방교부세 502억원 ▲조정교부금 184억원 ▲국도비보조금 115억원 ▲보전수입 576억원 등이다.
주요 편성 내역을 살펴보면 먼저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 ▲단독주택 도시 가스 공급사업은 4억원 증액된 10억원 ▲산내면 상수도 확충 15억원 증액된 45억원 ▲양남 환서교 재가설 공사 7억원이 증액된 17억원 ▲감포 권역단위 저점개발 10억원 증액된 16억원 등이다. 이어 ▲석장동 공용주차장 마무리 조성 15억원 ▲보덕 천군제3교 재가설 공사 8억원 ▲유림지하차도 구조개선 10억원 등을 편성했다.



전국도서지역기초의원협-여수시의회 협약.

남해군, 中 둔황시와 국제교류 재개

코로나19 이후 5년 만
남해군은 코로나19 영향으로 5년간 중단됐던 중국 둔황시와의 국제 교류를 최근 재개했다고 밝혔다.
군은 2007년 중국 간쑤성 둔황시와 자매결연을 맺고 2019년까지 공무원 상호 교환 등 활발한 교류 활동을 펼쳐왔다.
코로나19로 상호 교류가 어려웠던 시기에도 둔황시에서 남해군에 방역용 마스크 1만 장을 보내는 등 끈끈한 우호 관계를 이어왔다.
남해군은 그동안 정체돼 있던 둔황시와 국제 교류를 재개하기 위해 주젠

원 시장을 비롯한 둔황시 대표단을 초청해 지난 27일부터 29일까지 상호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남해군과 둔황시는 교류 친선 간담회를 열고 관광과 농업 분야를 중심으로 다양한 교류 활동을 추진하기로 하는 한편, 공무원 상호 교환을 재개해 실질적 결실을 거두기로 합의했다.
또 둔황시 방문단은 남해군 농업기술센터 주요 시설을 견학하며 농산물 가공과 개발 기술을 익히고, 안정적인 먹거리 출하 환경을 벤치마킹했다.
아울러 독일마을과 다랭이마을 일원을 방문해 다양한 체험 활동을 즐겼다.

전국서 여수세계박람회 성공 개최 힘 모아

전국도서지역기초의원협과 협약
강화군, 충남(보령시), 전북(부안군), 경북(울릉군), 경남(거제시, 남해군, 사천시, 통영시), 전남(고흥군, 신안군, 여수시, 영광군, 완도군, 진도군) 소속 기초의원들이 결성했다. 섬 지역 삶의 질 향상과 발전 방안 등을 위해 지난 2009년부터 활동하고 있다.
이번 협약에 따라 각 기초의회는 2026여수세계박람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상호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섬박람회 홍보와 참여에도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